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 활 섭 의원



“대전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이뤄내야.”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에너지자립화 시급. 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 관련 결단 필요.”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송 활 섭 의 원

국민의힘 대덕구 회덕·신탄진·석봉·덕암 지역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이끌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대전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미래 100년을 위해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덕구 중심부인 연축동 일대가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북부 신탄진 권역과 남부 오정·송촌동 권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는 대덕구의 혁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인 대덕구의 신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며 트램의 차량기지도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축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신청사의 건립방향은 기후위기 대응 제로에너지 건축물, 감염병 등 재난 대비 맞춤형 및 주민참여형 청사로 건립하여 연축혁신도시 조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구 신청사 건립계획은 건립기금 893억 원, 구비 307억 원 등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하여 신청사와 함께 에너지카페, 의회, 보건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덕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난 3월 6일 대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4월 1일에는 현 청사에 대한 매각·매입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은 더욱더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덕구 신청사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서는 대전시의 협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청사 이전과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침체된 대덕구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며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 대덕구의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청사 매입계획 및 활용방안과 함께 연축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대덕구의 종합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할 대안과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구가 종합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트램 지선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트램 계획이 연축차량기지에서부터 회덕역까지의 추가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램의 차량기지에서부터 회덕역까지의 연장은 약 1.9km의 단일노선으로 비용편익비가 0.57로 나오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예타면제 대상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계획 변경은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트램 차량기지에서부터 회덕역까지 지선을 연장하여 계획을 변경하거나 향후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탄진역이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건설사업에 포함되었고, 시장께서 공약하신 도시철도 3호선 계획까지 현실화된다면 신탄진역은 기종점의 역할로써,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으로써 왕래가 빈번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현재 신탄진역 서측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과 주민들은 1969년도에 완공돼 50년이 넘는 낡은 구름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역 서측은 동측과 달리 광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석봉동 일원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교통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출입구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 신설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신탄진역 서광장 신설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전시는 도시공간구조를 2핵 10지역거점 13생활권 중심체계로 구축하여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전시는 10개의 지역거점 중 하나로 신탄진을 선정하여 청주·청원 등 충청 북부지역의 연계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발전전략을 세웠고, 그 설정근거로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과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탄진지역의 성장 핵심인 재정비촉진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살펴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서광장 신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역세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전체 면적 중 56.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산업용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원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덕구 신탄진동을 포함하여 대청호 일원은 1980년 11월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77.7km²로 대전시 전체면적의 14.4%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금강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이자 가뭄과 홍수 예방은 물론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청댐 주변의 무수한 주민들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댐에 대한 규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나 되는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행위를 조금만 완화해 내 땅,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며 그저 본인의 최소한의 기본권 정도만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도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주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통령께서도 환경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환경규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지역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던 사안인 대청호 일대의 규제완화를 위한 추진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우리 시 노력과 국가의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기초를 바탕으로 이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청호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과도한 입지 제한을 해소하고 기이 설치된 대청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규제가 아닌 자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청호 유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대청호 관광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화에 관하여 대전시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망의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화 정도는 1.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가 필요한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이상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이지만 현재 전력공급 비중이 0.65%로 굉장히 미미하고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열병합발전소 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인데 문제는 우리 대전시가 이 발전소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는 점입니다.

2019년에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했던 LNG발전소 건설계획과 유성구 도안동 인근에 예정되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대전시의 치밀한 계획 미숙,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향후 에너지정책 추진은 난항을 겪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애만 쓰고 소득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대전열병합발전이 노후화된 113MW 증기터빈 발전을 495MW급 가스 복합화력, 즉 LNG로 증설하는 변경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사업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발전효율은 올려서 대전시의 2040년 전력자립도 목표인 20%를 상회하는 24%를 2026년에 확보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열병합발전소 측의 계획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이 증설 문제를 두고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투쟁위 중심으로 서명운동, 집회, 기자회견 등으로 거세게 반발하였고, 그에 따른 여파였는지 작년 6월 허태정 전 시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의 허가여부가 1년이 넘게 판단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측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자체적인 전력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정을 미룬다면 자칫 에너지 자립화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허가권자가 산업통상부 장관이고, 건축허가는 대덕구 소관이어서 대전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의견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립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장우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에너지 자립도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전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대전시는 어떠한 입장인지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장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의 다섯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활섭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덕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에 대덕구청장께 대덕구의 일이 대전시의 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대덕구가 연축지구에 대덕구 청사를 짓게 되는데 한 1,200억 가까이 예산이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 기금 893억 등 여러 가지 해도 상당히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구 청사를 제가 직접 지어봤습니다만 대덕구의 현재 예산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적인 것과 예산 지원이 신속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송활섭 의원님의 발언취지와 같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민선 7기 대덕구와 청사 매입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기존 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 대덕구 청사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동의를 받아서 매입 절차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은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대덕구가 짓는 신청사는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대덕구의 새로운 부흥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발전 대안·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LH 사업 시행자 지정,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국토부 고시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1월쯤에 본격적인 보상 착수에 대비한 준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 연축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대덕구 청사 이전 등 신행정타운 조성과 공동주택이 1,435세대가 공급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유통 자족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연축지구와 연계한 추가 개발사업이나 과학특구 및 과학벨트 등과 연계한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이 확정되면 개발계획변경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연축지구 개발사업의 단계별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되고 또 혁신도시와의 시너지를 통해 획기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덕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상서 공공주택지구사업,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회덕IC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대덕구의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5개 구의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서 차량기지에서 회덕역까지 연장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회덕역까지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덕역에서 트램 지선 연장을 만약에 우리가 먼저 결정했을 때 수요 중복으로 인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상황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검토하고 또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요예측 재조사가 완료되고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저도 적극적으로 시기를 봐서 회덕역까지 지선 연장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회덕역 노선 연장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용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 시민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의 재검토입니다.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광장 및 서측출입구 신설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낙후된 신탄진지역을 2007년 12월 28일에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또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325억 원을 투입해서 신탄진역 일원에 석봉동 어린이공원 1개소, 도로 확장공사 4개소, 신탄진역 보도·육교 보수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 현재는 신탄진역 일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재정비촉진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론수렴과정 등 사회적 합의과정에서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입안권자인 대덕구청장의 계획변경 신청이 만약 있을 경우에 서광장 조성 그리고 역사 주변 시설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탄진지역 전체가 대전시의 큰 틀 안에서 더 발전해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 정책적 배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지역의 음식점 면적 확대 및 숙박시설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실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77.7km²에는 동구의 대청동이 79%를 차지하고 있고 대덕구의 신탄진동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19·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환경부의 국정감사 질문 등을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서 전전 정부, 모든 정부들이 상당히 환경부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시장 취임 후에도 대청동 주민들과 이미 간담회를 했고요, 음식점 면적이 100m² 이하라는 과도한 제한과 숙박업은 물론 민박업도 일체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뵈고, 지난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환경부 장관께 일부 제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가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인근 지자체와 공감대를 통해서 이런 과도한 규제가 개혁돼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도지사도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지사와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수 차집관로가 대부분 다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지역에 대한 차집관로 문제가 다 해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이미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청호와 대청호반을 시민들께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앞으로 송활섭 의원님의 말씀대로 대청호지역의 규제완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협력도 요청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송활섭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발전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한 현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활섭 의원(1차 보충질문)

시장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덕구,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고요.

제가 정치한 목적은 대덕구가 언제까지 소외된 변두리로, 낙후된 도시로 하는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도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대전시도 이제는 대덕구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여기에 계신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 것으로 믿고요.

열병합발전소 에너지 자립과 관련돼서 시장님께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잠시 이걸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우선 에너지 자립도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의원님과 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일류 경제도시의 기반은 결국 산업용지를 500만 평 확보하고 그 500만 평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데, 결국 산업용지에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오려면 일단 아주 양질의 전력공급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립도가 워낙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87%의 전력자립도를 2025년도에 4.86%, 또 2040년도에는 20.45%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수요 효율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상생형 연료전지발전소 또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과 관련해서 향후 2040년까지 20.45%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대전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은 민선 7기에 아마 이 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법에 따라서 대전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신청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현재도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노후설비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고 또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현격히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 됩니다.

또 설비용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낮은 가격으로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혼선이 있었던 대전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더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설비를 490 MW로 증설하고 연료전지는 신설해서 12.3MW 증설하는데, 과거에 노후된 설비를 고효율 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고효율 친환경 시설로 했을 때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후설비는 신속하게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민들하고 좀 더 이 문제는 소통을 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활섭 의원

대전시 에너지 자립화에 대해서 시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활섭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